



도미니카공화국

물가 안정을 위한 비상 경제조치 단행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의 시행에 힘입어 통신, 전력,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4.2%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 둔화, 베네수엘라 및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경제여건의 악화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물가불안도 커지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4.7%와 7.6%를 기록한 이후 3/4분기에는 2.0%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1년 4.4%에서 지난해에는 10.6%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금년 들어서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0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3.3%로 치솟는 등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국 정부는 지난 2월 9일 한시적 관세 인상, 정부지출 억제, 공공요금 보조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상 경제조치¹⁾를 단행하였다. 이번 조치로 한때 25페소까지 상승하였던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²⁾은 3월 현재 23페소 수준으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3월 4일부터 전기요금이 25% 인상되는 등 공급 측면의 비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물가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적자 감축이 긴요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재정긴축이다. 차입에 의존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국내이자율 인상과 페소화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 1) 동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수입관세 10%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를 억제하고, 정부지출을 가능한 한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 교통요금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 2)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통화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음.

다. 메히아 정부³⁾는 2000년 8월 출범 이후 국제유가 상승, 전력난 심화, 9.11 뉴욕 테러사태에 따른 관광객 감소, 미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對美수출 감소 등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하는 등 경기가 부진을 보이자,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시행해 왔다. 2001년에는 5억 달러의 해외채권을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을 시도하였으며, 금년 1월에도 6억 달러의 해외채권을 연리 9.04%, 상환기간 10년의 조건으로 발행하여 외환시장 및 이자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6억 달러의 대부분은 정부의 단기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외환보유액으로 확충된 것은 1억 3,0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폐소貨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부문의 인건비 감축이다. 이는 메히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33.1만 명에서 37.8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가 전체 정부예산의 42%(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치 급여를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하여 12.8만 명의 공무원을 감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메히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처럼 대규모의 공무원 인력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7월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메히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메히아 대통령의 지지율도 30% 수준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메히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공무원 인력구조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빈번한 단전 사태가 경제활동에 지장 초래

물가불안과 함께 전력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단전 사태 발생도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⁴⁾ 이후에도 전력난이 해소되지 못하여 단전사태⁵⁾가 계속되고, 이에 항의하는 소요가 빈발

3) 메히아 대통령의 現정부는 출범 당시 페르난데스 前대통령 정권으로부터 70억 페소(3억 5,000만 달러)의 재정적자와 250억 페소(6억 2,500만 달러)의 정부 공사계약에 의한 부채를 떠안은 상태였음.

4) 도미니카공화국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1999년 국영전력공사(CDE)를 분리하여 2개 화력 발전회사와 3개 배전회사를 민영화(수력발전회사, 송전회사, 기술지원회사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민영화 국제입찰 결과, 66.4만 KW 발전용량의 Haina 발전회사와 57.3만 KW 발전용량의 Itabo 발전회사가 각각 Seaboard社와 New Caribbean Investment社에 낙찰되었으며, 북부 및 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2개 배전회사와 동부 지역을 관할하는 배전회사는 각각 스페인계 Union Fenosa社와 미국계 AES社에 낙찰되었음.

5) 단전사태는 발전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외에도 정부기관을 포함한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연체함에 따라 배전회사가 발전회사에 전기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음. 배전회사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누적된 정부의 체납 전기요금은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2년 9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보조금 철폐, 요금인상, 전력회사들과의 계약내용 재협상 등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새로운 전력요금체계가 도입되었고, 전력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평균 45.1%(최소 28%에서 최대 132%) 상승하였다. 또한, 국영전력공사(CDE)를 통한 전력 매매에서 발전회사가 직접 배전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정부기관도 전력요금을 CDE가 아닌 배전회사에 직접 납부토록 변경하였다.

한편, 전력회사는 매달 국제유가, 물가상승률, 환율 등을 감안하여 전력요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350만 명의 전력요금 인상분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력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전력 부족량이 300MW 수준에 이르는 데다 전력수요 증가율은 매년 7%에 이르고 있지만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전력 부문의 투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경제성장률은 2.3%로 낮아질 듯

이처럼 물가불안과 전력난 지속 등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금년도 경제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⁶⁾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폐소화 가치와 물가의 안정을 위한 비상 경제조치를 단행하는 등 경기악화에 대비하고 있으나, 당분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년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으로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8.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불안은 이라크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상승과 세계경제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라크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어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는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도 관광산업과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금년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의 향방은 이라크 사태로 대변되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영 석】

6)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관광산업 및 건설업의 호조와 민간투자의 증가로 1996년 이후 연 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1년에는 미국의 경기둔화와 9.11 뉴욕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산업 등이 부진하여 경제성장률이 1.9%로 하락하였음.